오은선 여성 세계최초 히말라야 14좌 완등

죽을 고비 수없이… 사투 13년

2년 연속 4개 봉우리씩…속도전으로 경쟁자 제쳐

1997년 7월 가셔브롬Ⅱ봉을 시작으로 히말라야 8천m 봉우리 등정을 시작한 오은선(44·블랙야크) 대장이 13년 만인 2010년 4월27일 안나푸르나(8천91m)에 오르며 14좌 완등 대장정을 마쳤다.

머리가 깨질 정도로 아프고 숨도 제대로 쉴 수 없을 정도로 힘든 14좌 완등 과정은 오 대장에게도 자신의 한계에 절망하며 쓰러졌다가 다시 일어서는 도전의 연속이었다.

오 대장은 히말라야에 오르면서 수차례 죽음의 문턱까지 갔다가 운 좋게 살아 돌아왔다. 2006년 시샤팡마 등정 길에 굴러온 얼음 덩어리에 맞아 갈비뼈가 부러졌을 뿐 아니라 눈사태로 죽을 고비를 수없이 넘겼다.

앞서 2004년에는 에베레스트 꼭대기를 밟고 내려오다가 탈진해 쓰러져 있는 오 대장을 다른 원정대 셰르파가 발견해 텐트 안으로 옮긴 뒤 산소마스크를 씌워줘 겨우 목숨을 건졌다.

에베레스트 원정에서는 또 동료 산악인인 박무택이 로프에 매달려 숨져 있는 것을 보고도 정상에 올랐다고 해서 '독한 년'이라는 비난도 들어야만 했다.

작년 7월 오 대장의 14좌 완등 경쟁자이자 좋아하던 후배였던 고미영 대장이 낭가파르밧에서 추락 사고로 세상을 떠난 것도 큰 충격이었다.

오 대장은 고 대장이 숨지기 불과 몇 시간 전 낭가파르밧 정상을 밟고 내려오면서 만났다.

정상 등정에 성공한 오 대장에게 고 대장은 "축하한다"고 인사했고 오 대장도 "잘 갔다 오라"며 격려해줬다.

주위에서는 두 여성 산악인이 세계 여성 최초 히말라야 14좌 완등자라는 타이틀을 놓고 경쟁하다 고 대장이 숨졌다며 비난의 화살을 오 대장에게 돌리기도 했다.

오 대장은 "(고)미영이는 서로 얼마나 힘이 됐는지 알고 있을 것"이라고 말하며 주위의 따가운 시선을 견뎌야 했다.

14좌 완등을 위해 2008년과 2009년 2년 연속 4개 봉우리씩을 오르는 속도전을 펼친 오 대장에게 마지막 남은 안나푸르나는 반드시 넘어야 할 큰 산이었다.

하지만 작년 10월 첫 도전에서 안나푸르나는 그녀를 받아주지 않았다.

눈과 안개로 1m 앞도 보이지 않는 화이트 아웃 현상과 초속 35~40m의 강풍 때문에 정상이 눈앞인데 눈물을 머금고 돌아서야만 했다.

아쉬움을 뒤로 하고 귀국한 그녀를 기다린 것은 앞서 그 해 5월 오 대장이 정말 칸첸중가 꼭대기를 밟았느냐는 논란이었다.

일부 국내 산악인들은 오 대장이 칸첸중가 정상에서 찍은 사진이 정상임을 확인하기에 불충분하고 등정 소요시간도 너무 짧았다며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오 대장은 함께 등정한 셰르파와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악천후로 시야가 매우 좋지 않았다. 함께 등정한 셰르파 3명이 정상이라고 말해 줬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지난 17일 안나푸르나에 오르면서 오 대장과 같은 13좌를 달성한 스페인의 에두르네 파사반(36.스페인)과 일부 외신은 작년 국내에서 문제가 됐던 칸첸중가 등정 논란을 다시 끄집어내며 흠집을 내려고 했다.

파사반에 쫓기는 상황이 된 오 대장은 지난 25일 안나푸르나 정상에 도전하기로 계획을 세웠지만 강한 바람과 눈보라가 치는 날씨 때문에 다시 물러나며 마음을 졸여야 했다.

그렇지만 결국 27일 오후 안나푸르나 정상을 밟으면서 세계 여성 최초의 히말라야 완등자로 역사에 남게 됐다. /연합뉴스

오은선 대장(블랙야크)이 22일 캠프 2를 향해 등반하고 있다. 오 대장은 여성 최초로 8000m급 14좌 완등에 성공했다. /연합뉴스

후보 확정이냐 재경선이냐

민주당 재심위 오늘 광주시장 경선 재심청구 심의

객관적 증명 미지수…어떤 결과 나오든 논란 불가피

민주당 재심위(공직후보자추천재심위원회)가 28일 오후 회의를 갖고, 광주시장 후보 경선과 관련, 이용섭 의원과 정동채 전 의원의 재심 청구에 대해 심의할 예정이어서 정치권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서울 남부지법도 이날 이용섭 의원과 정동채 전 의원이 제기한 당선인 결정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한 인용 혹은 기각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여 광주시장 후보 문제가 이번 주 내에 가닥 지어질 전망이다.

◇**재심위 논의**=민주당 재심위는 이날 광주시장 후보 경선 문제를 최종 결정짓고 결과를 최고위에 넘긴다는 방침이다.

유선호 재심위원장은 이와 관련, "정치적 결정보다는 법적 요건을 철저히 따지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재심위의 주요 쟁점은 민주당 광주시장 후보 경선에서의 전화면접 전당원 여론조사시 발생한 모 언론사의 ARS 여론조사가 경선 결과에 구체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쳤느냐가 될 것으로 보인다.

재심위는 이날 자체 조사 자료와 선관위에서 넘긴 최종 보고서 등을 토대로 집중 심의한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재심위나 선관위가 수사권이 없다는 점에서 ARS 여론조사가 과연 광주시장 후보 경선 결과에 어떤 영향을 줬는지를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을 것인지는 미지수다. 어떤 결과가 나오든 정치적 논란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얘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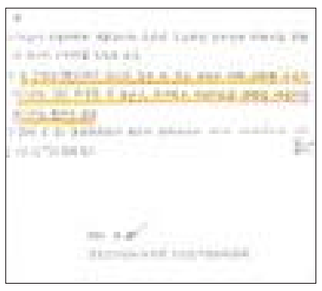
◇**재심위 결과**=재심위에서 재심을 기각할 경우, 경선에서 승리한 강운태 의원은 최고위원회의 의결과 당무위원회 인준 등을 거쳐 민주당의 광주시장 후보로 확정될 전망이다.

이에 반해 재심위에서 이용섭 의원과 정동채 전 의원이 제기한 재심 요청을 수용할 경우, 공은 최고위원회의로 넘어갈 전망이다.

하지만 최고위원회는 상당히 난처한 입장에 처할 것으로 보인다. 재심위의 결정을 수용하거나 혹은 뒤엎는 경우 모두 감당하기 힘든 후폭풍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광주시장 후보 재경선을 실시하는 문제도 시간이 넉넉지 않다는 점에서 난제다.

한편, 이날 결정되는 남부지법의 광주시장 후보 당선인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의 인용 혹은 기각 여부도 재심위 및 최고위의 결과에 상당한 영향이 예상된다.

◇**선관위 최종보고서**=민주당 선관위는 지난 26일 최종 보고서를 통해 광주시장 후보 경선 과정에서 발생한 모 언론사의 여론조사가 경선 결과에 어떤 영향을 미쳤느냐는 쟁점에 대해 "상당한 의심이 야기되는 것은 부정할 수 없으나 증거법상 객관적으로 증명된 사실이라 보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밝혔다.



민주당 선거관리위원회의 광주시장 경선 관련 조사 보고서.

또한, 지난 23일 선관위가 만든 보고서 원본에는 "강운태 후보 측과의 연계성에 대해서 의심은 있으나 객관적으로 증명된 사실이라 보기에는 증거법상 어려움이 있다"고 적시했다.

선관위 최종 보고서는 현재까지 검찰 수사의 결론이 나지 않았고 검찰의 증거 자료를 입수할 수 없는 상황에서 재심위가 자체 정보와 선관위의 조사 내용 등을 통해 판단하거나 법원 및 검찰의 결정을 지켜본 뒤 최종 결정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한편, 'ARS 여론조사가 민주당 광주시장 경선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는 증거를 찾지 못했다'는 선관위의 보고서 관련한 광주일보의 26일자 기사에 대해 이용섭 의원 측은 '오보'라고 주장하는 성명서를 낸 바 있다.

/임동욱 기자 tuim@kwangju.co.kr

재심위, 인정땐 최고위원회서 최종 결정

6·2 지방선거 민주당 경선과 공천 과정에 각종 잡음이 발생하면서 당무위원회, 최고위원회, 공심위원회, 재심위원회 등 각종 의사결정기구의 역할이 관심을 끌고 있다.

◇**당무위원회**=당무 집행에 관한 최고의결기관으로 당헌에서는 당대표·최고위원·원내대표·사무총장·정책위원회 의장 등 당 지도부, 국회부의장 및 상임위원장, 중앙당의 윤리위원장·재정위원장·예산결산위원장 등 고위 당직자, 시·도당위원장, 당소속 시·도지사 등 70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하고 있다. 27일 현재 당무위원은 61명이다. 이들은 강령·당헌·규에 관한 의사 결정, 예산과 결산의 심의·의결, 시·도당위원장 및 지역위원장의 인준 등을 처리한다. 28일 논의될 전남도지사 후보 인준과 같은 최고위원회 의결을 거쳐온 당의 공직후보자 추천(공천) 최종 인준도 당무위의 권한이다.

◇**최고위원회**=당무 집행에 관한 최고책임기관으로 당대표, 선출직 5인, 지명직 2인, 원내대표 등으로 구성된다. 이들은 당 주요 정책과 당무, 당직 인사, 예산·결산에 관한 심의·의결 등을 하며 특히 선거 전에 공심위 구성, 경선 방법의 결정 및 변경, 공직후보자 의결, 전략 공천지역 결정 등 공천 전반에 관한 의사결정을 한다.

◇**재심위원회**=후보자 신청 당사자는 심사(또는 경선) 결과에 대해 이의가 있을 경우, 결과 발표일로부터 2일 이내에 재심을 신청할 수 있다. 민주당은 이번 지방선거에서는 시민공천배심원제와 광역자치단체장 후보 심사의 경우 중앙당재심위원회에서, 기타 심사의 경우 중앙당공심위에서 심의·의결을 하도록 했다. 재심위의 결정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면 최고위원회는 후보교체, 재경선 실시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하며 후보교체가 있을 경우에는 당무위원회의 인준으로 추천이 확정된다. /박지경기자 jkpark@